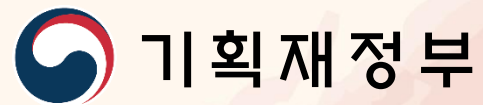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29.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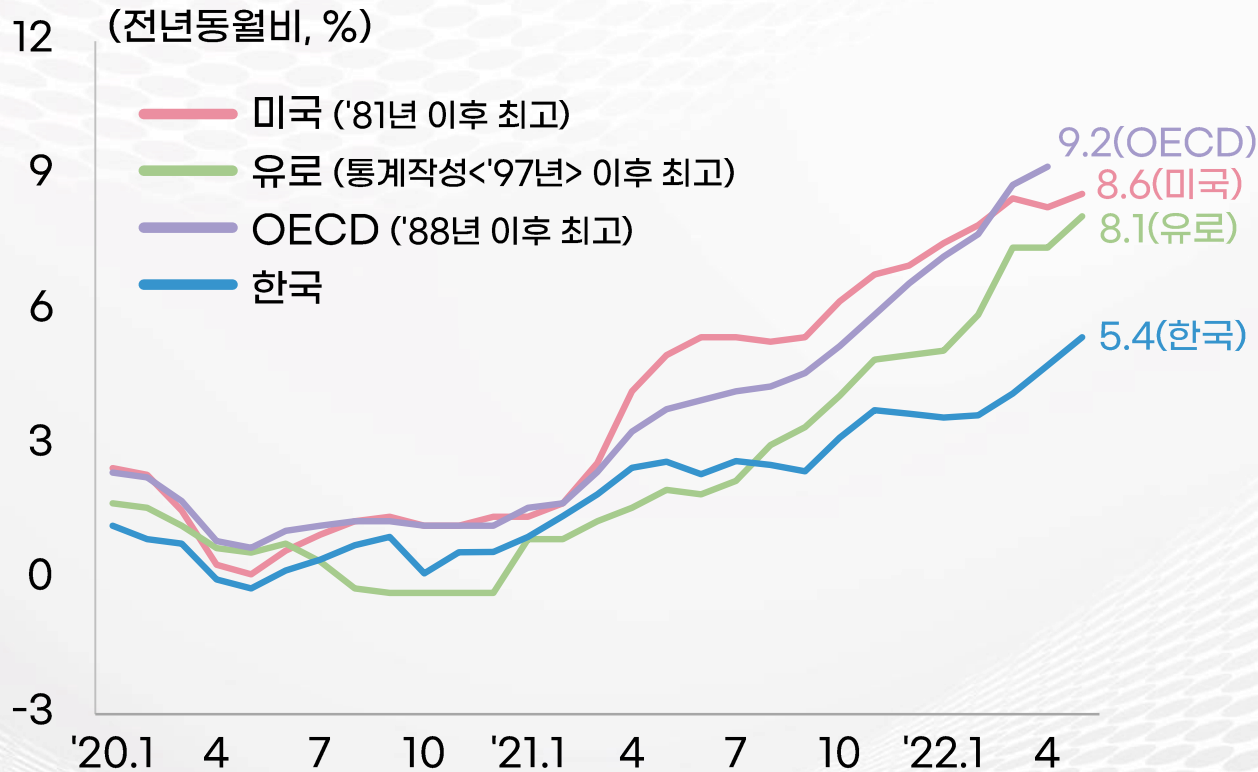
- I. 우리경제 상황
- II.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III. 당면 현안 대응
- IV. '22년 경제전망

I. 우리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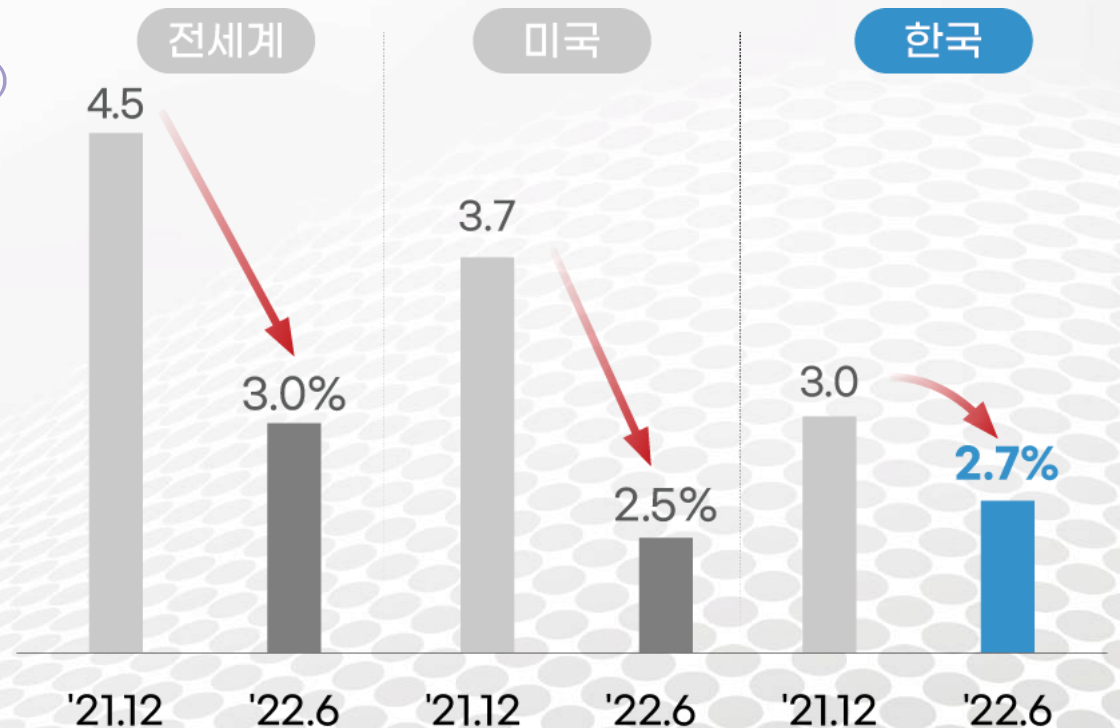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경기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복합위기 상황**

→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에너지·곡물가격 급등 등 해외발 요인에 주로 기인**

<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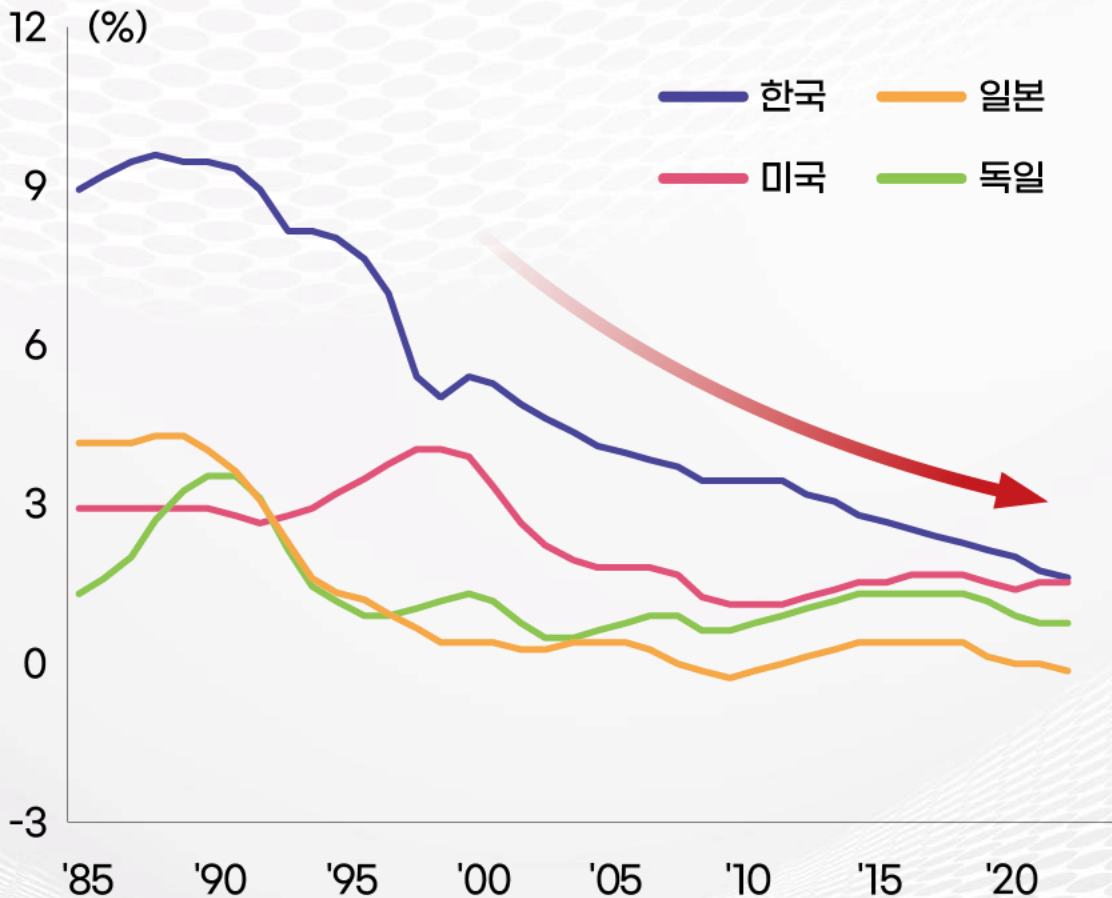
<전망시점별 '22년 성장률 전망(OECD)>



I. 우리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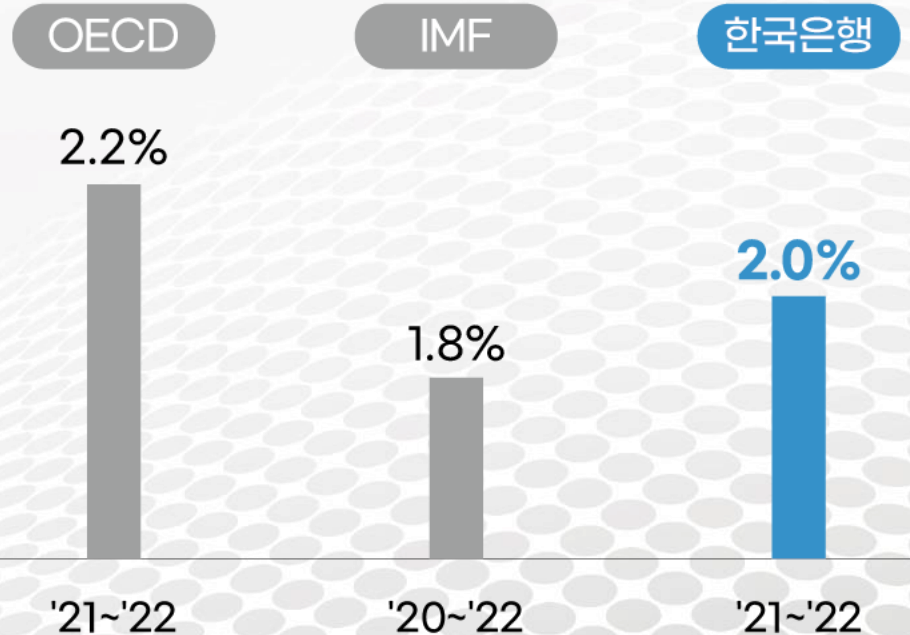
해외발 요인+구조적 요인 → 잠재성장률 빠른 속도로 하락

<주요국 잠재성장률 추이(OECD)>



'21~'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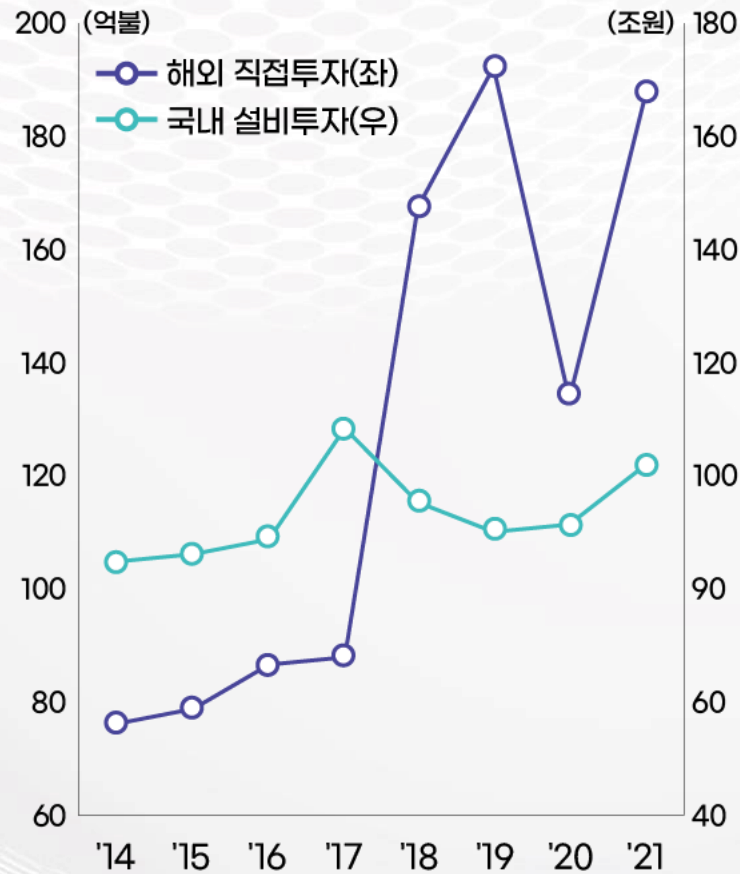
2%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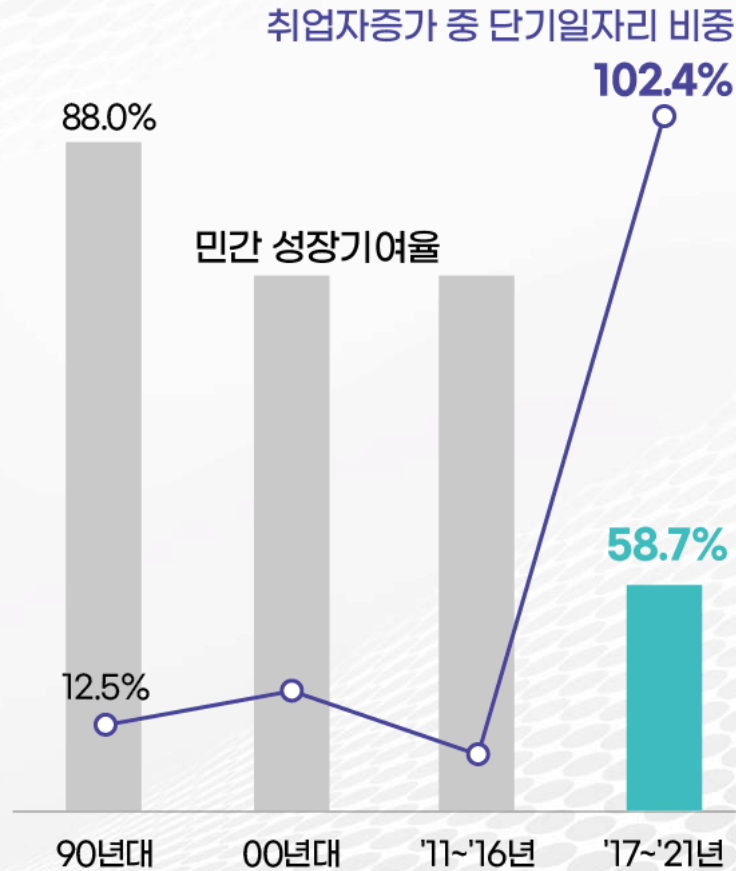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

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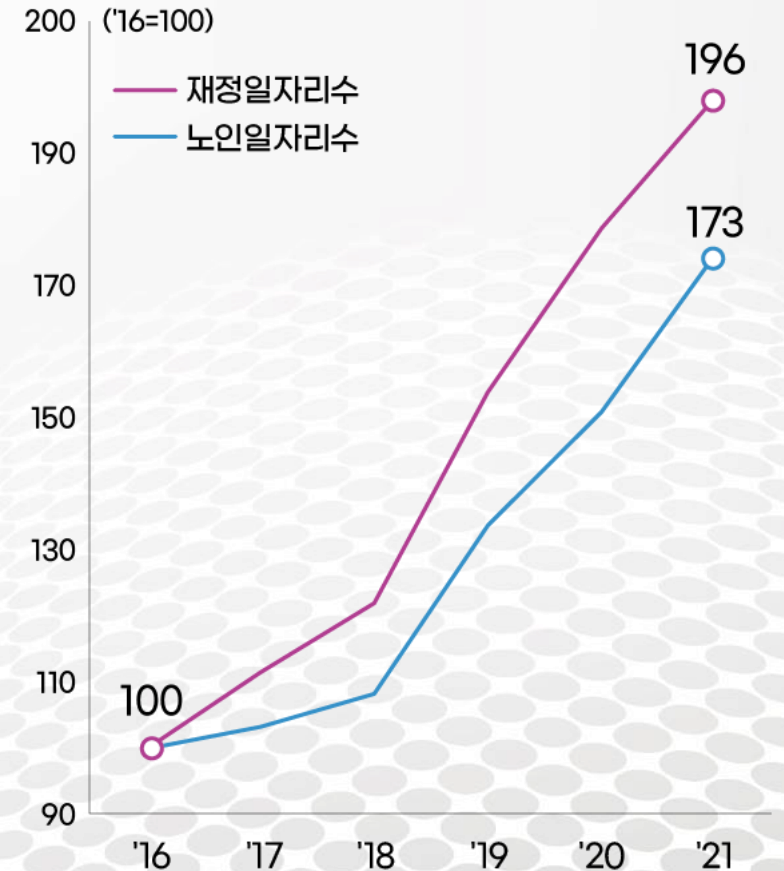
<제조업 국내·해외투자>



<민간 성장기여율 및 단기일자리 비중>



<재정·노인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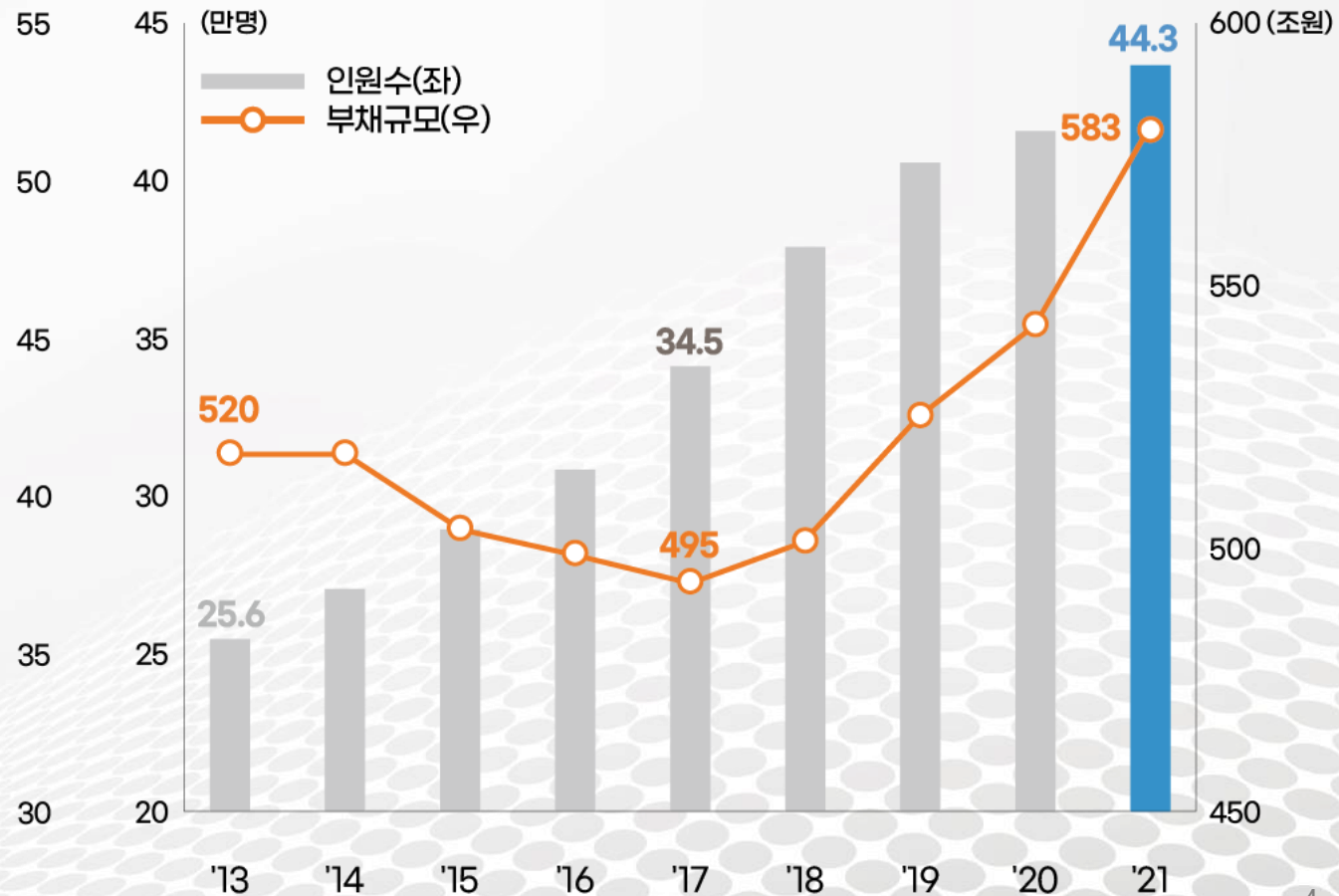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

② 재정 중심 경제운용, 공공기관 방만운영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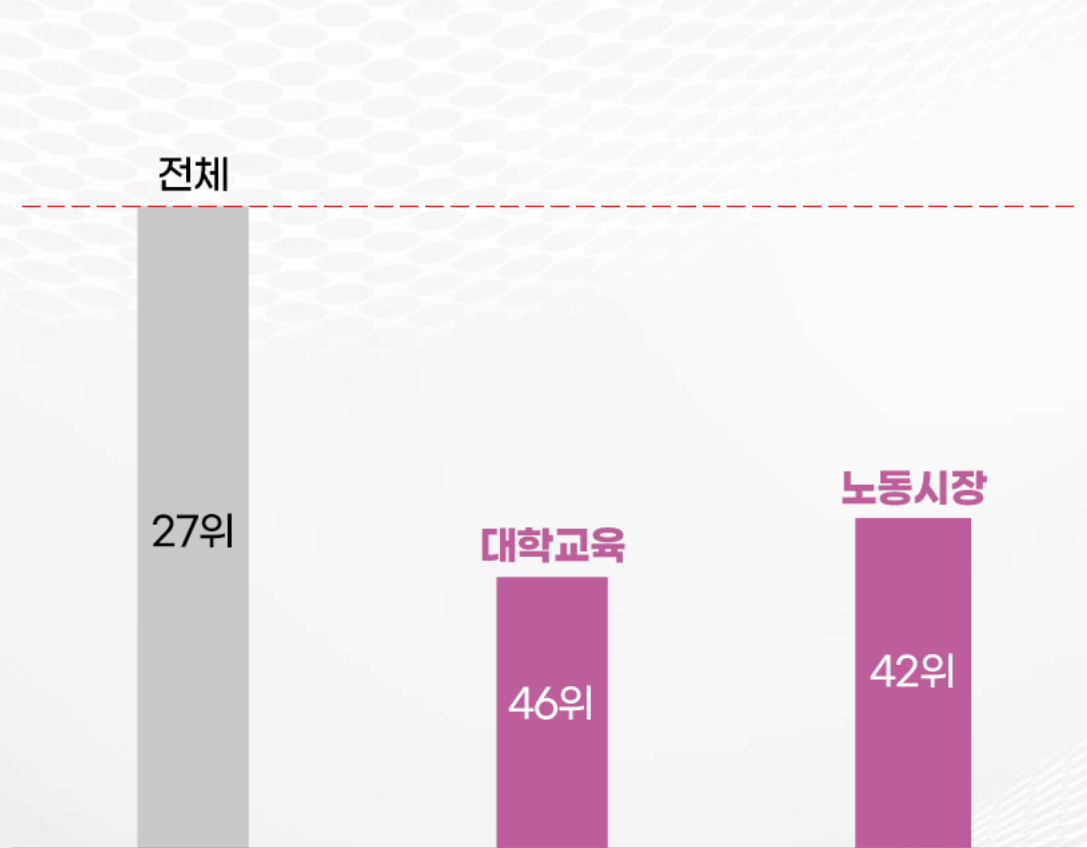
<공공기관 인원 및 부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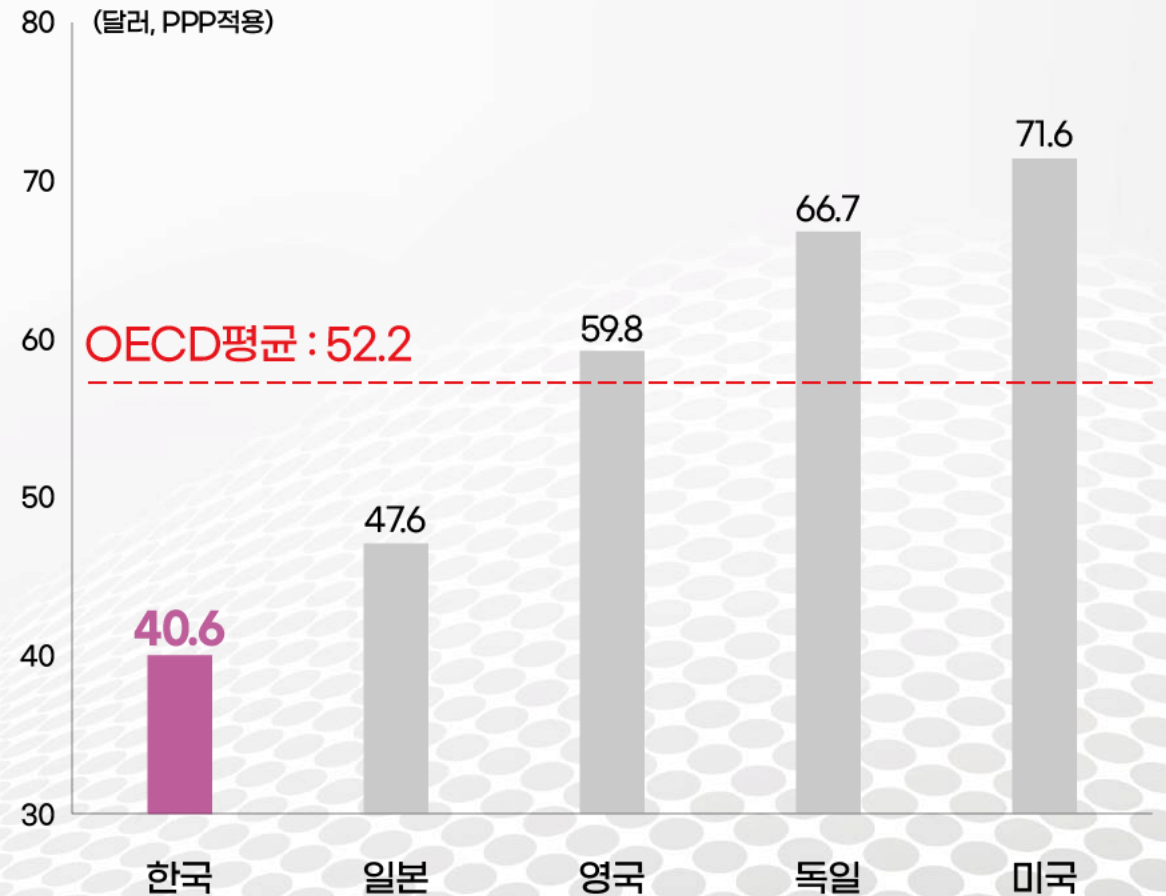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

③ 비효율적·경직적 노동·교육 시스템 : 낮은 국제경쟁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추이('22, 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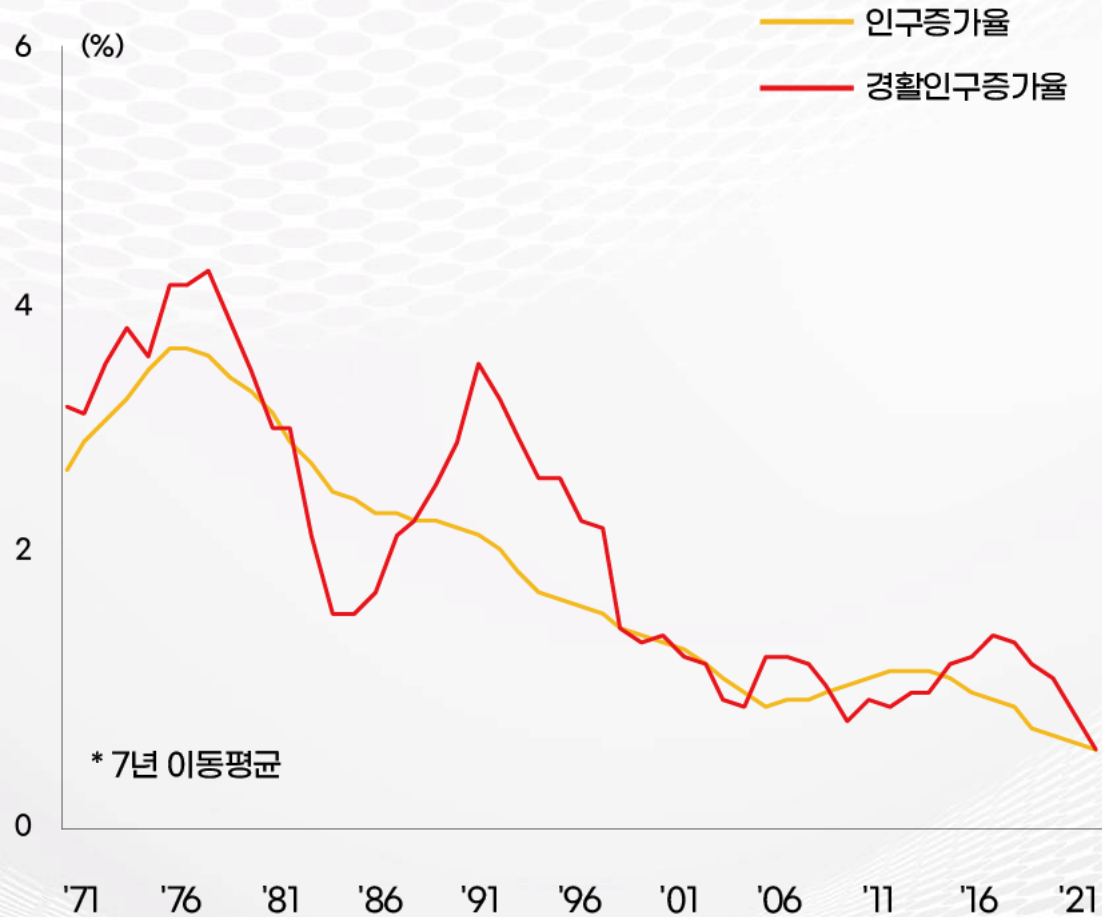
<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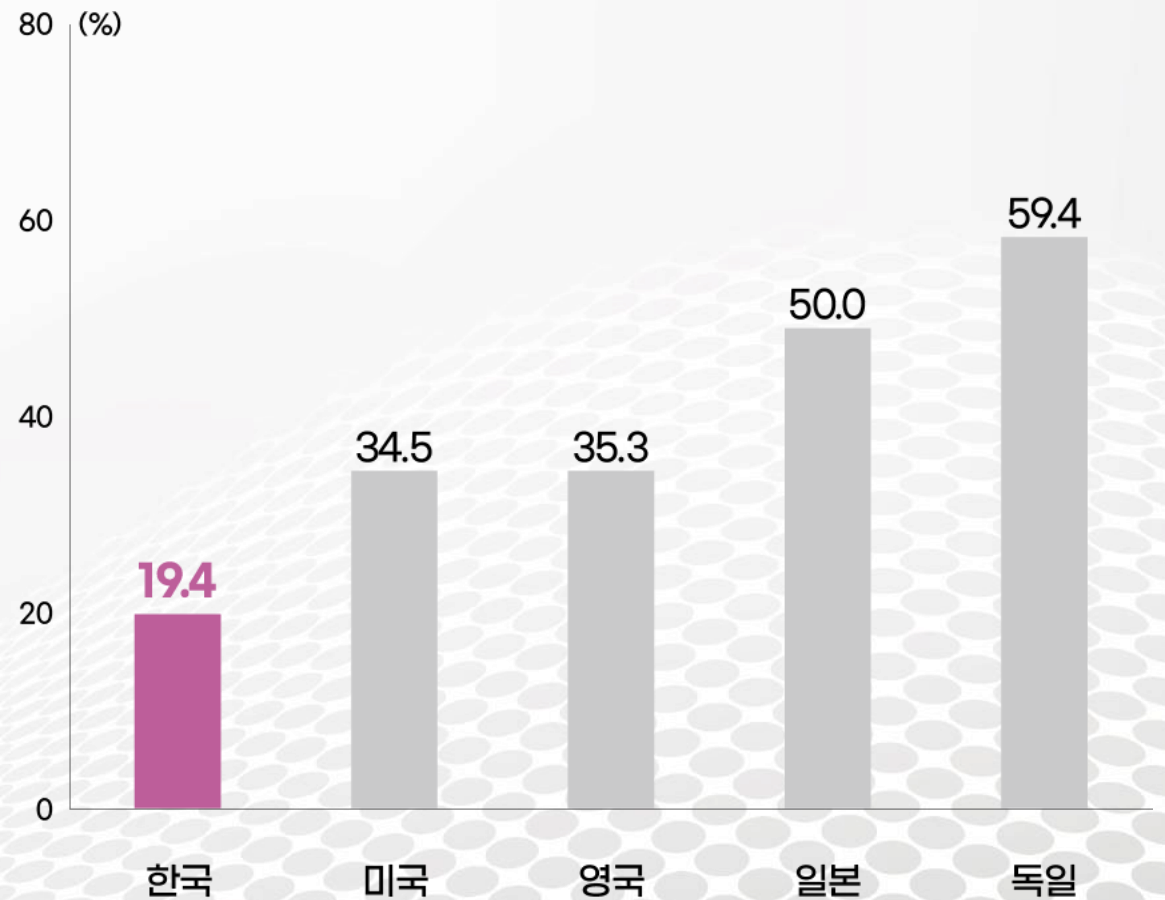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

④ 생산인구감소 전환('20)으로 생산성 증가가 긴요하나 선진국 절반 수준

<인구·경제활동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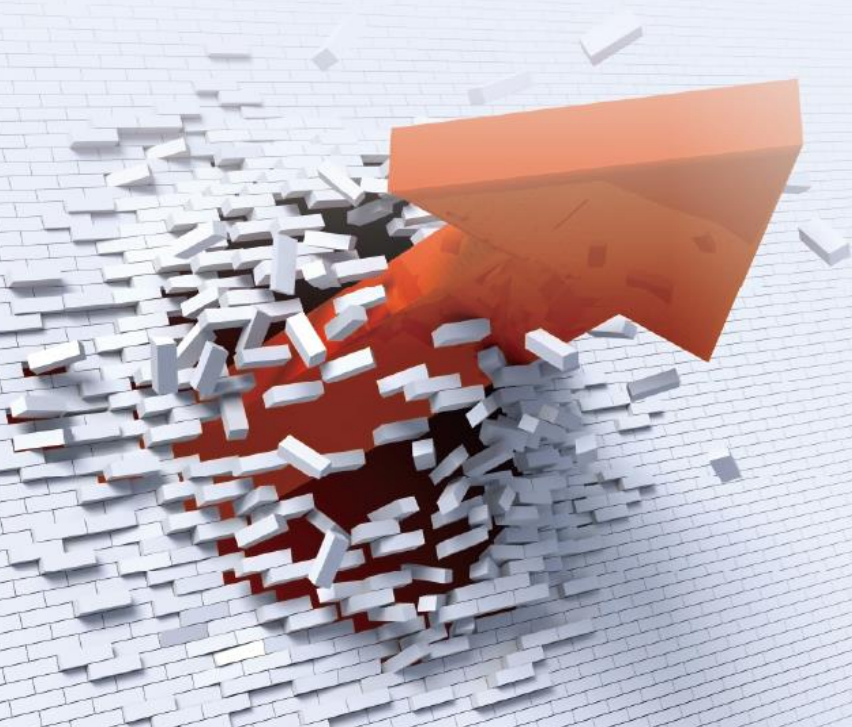


<총요소생산성 기여율('01~'17)>



경제운용 : 정부 주도 → 민간·기업·시장 중심 대전환 하여

당면 위기 돌파 + 저성장 극복기반 마련



새정부 경제운용 4대 기조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

자유

공정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운용
4대 기조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성장·미래대비 기반 확충

혁신

연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목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4대
정책
방향

1. 민간중심 역동경제

- ① 규제 혁파·활력 제고
- ② 투자·일자리 창출
- ③ 중소·벤처기업 육성
- ④ 공정 시장질서 확립

2.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① 공공·연금개혁
- ② 노동시장 개혁
- ③ 교육개혁
- ④ 금융·서비스산업 혁신

3. 미래대비 선도경제

- ① 과학기술·R&D 혁신
- ② 첨단 전략산업 육성
- ③ 인구구조 변화 대응
- ④ 탄소중립 대응

4. 함께가는 행복경제

- ① 사회안전망 강화
- ②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③ 복지시스템 고도
- ④ 지역균형 발전

자유·공정
혁신·연대

당면
현안
대응

1. 민생안정

- 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② 주거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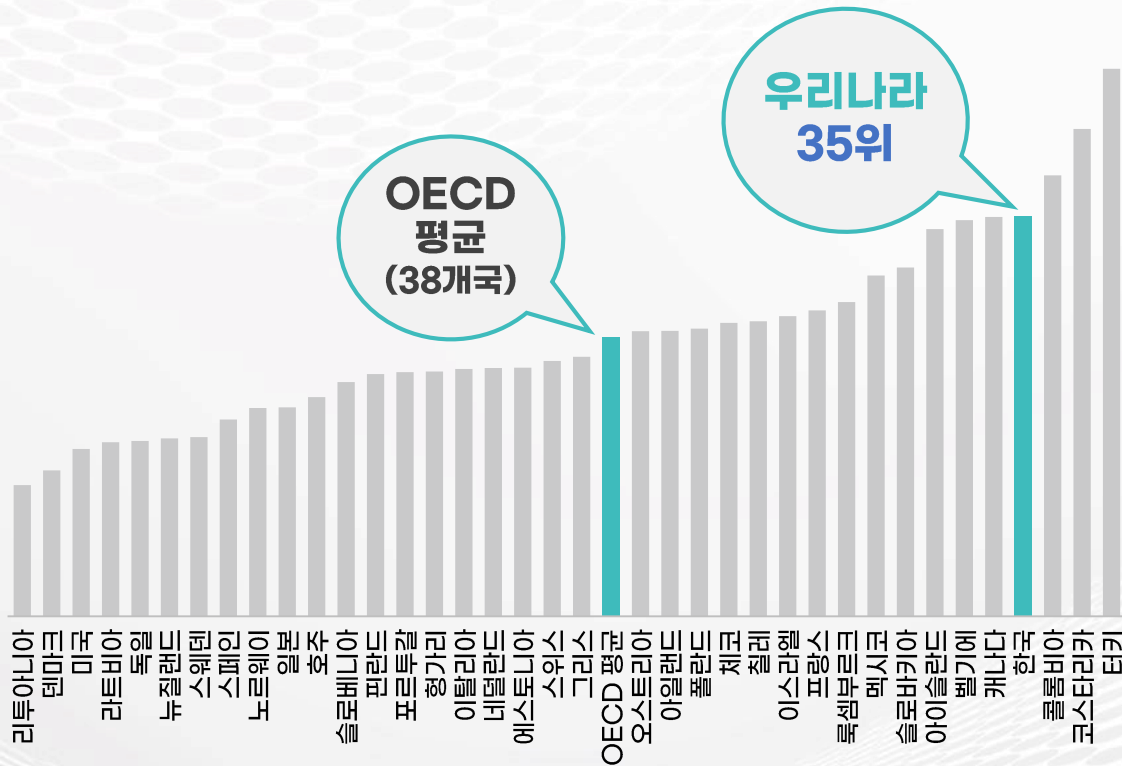
2. 리스크 관리

- ① 경제안보 대응
- ② 위기관리 강화

① 규제혁파 : 그간 과도한 규제로 투자·일자리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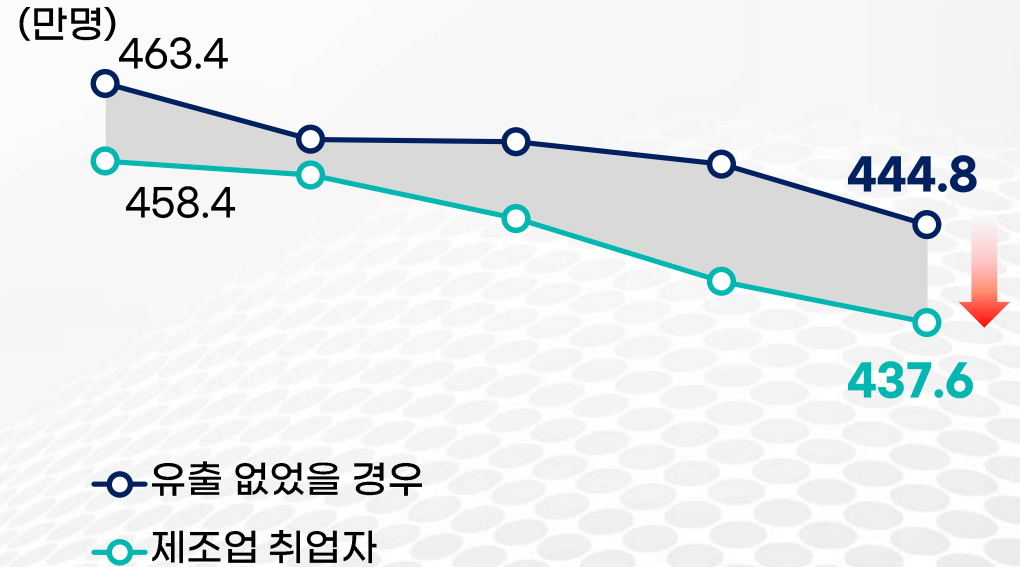
✓ OECD 최고수준 규제

< 진입장벽 규제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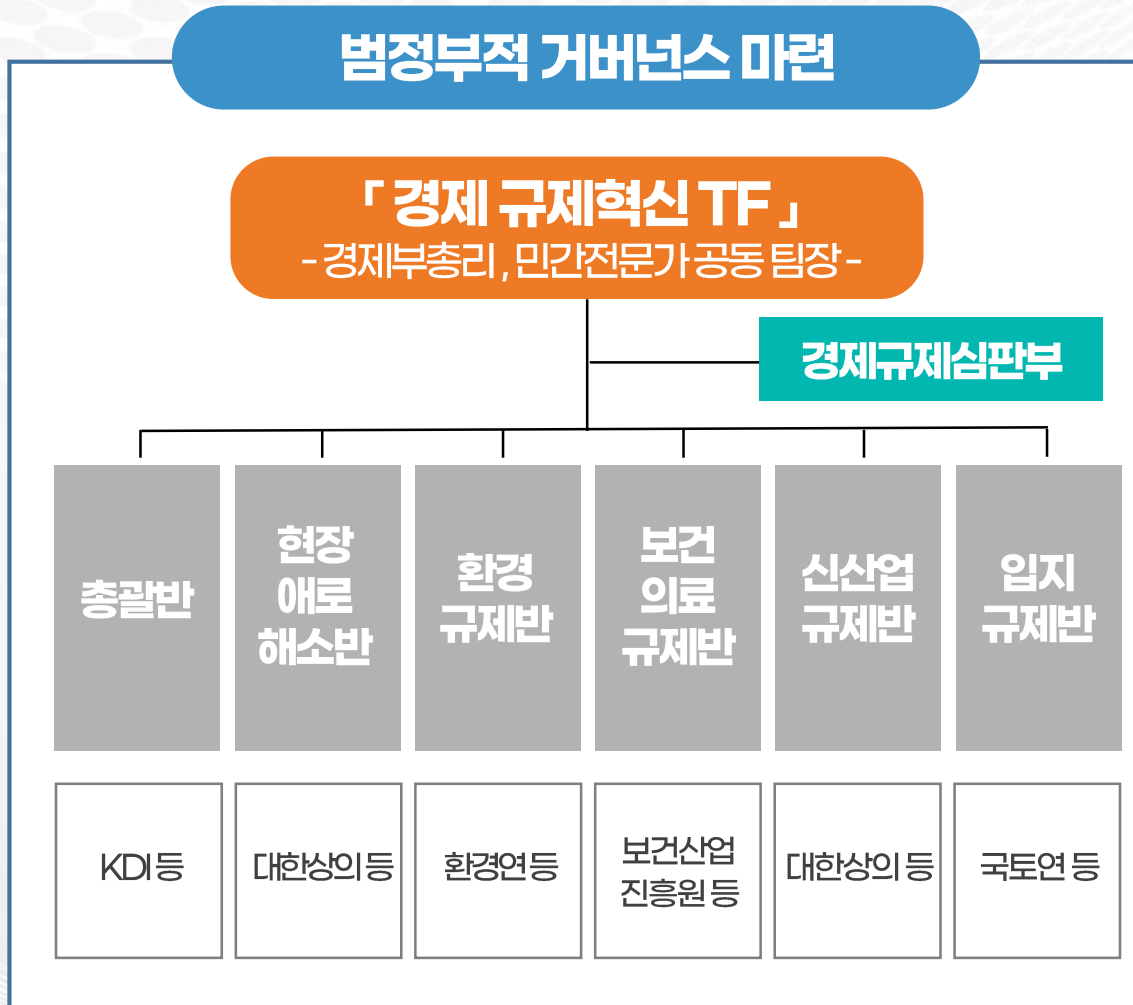
✓ 기업이 해외투자를 늘리며, 일자리 유출도 가속화

< 제조업 취업자 수 >



제조업 일자리 연평균 6.1만개 유출 추정('16~'20, 한경연)

①-1 강력한 규제혁신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및 절차

● **(추진전략) 4대 기본원칙下 체계적 규제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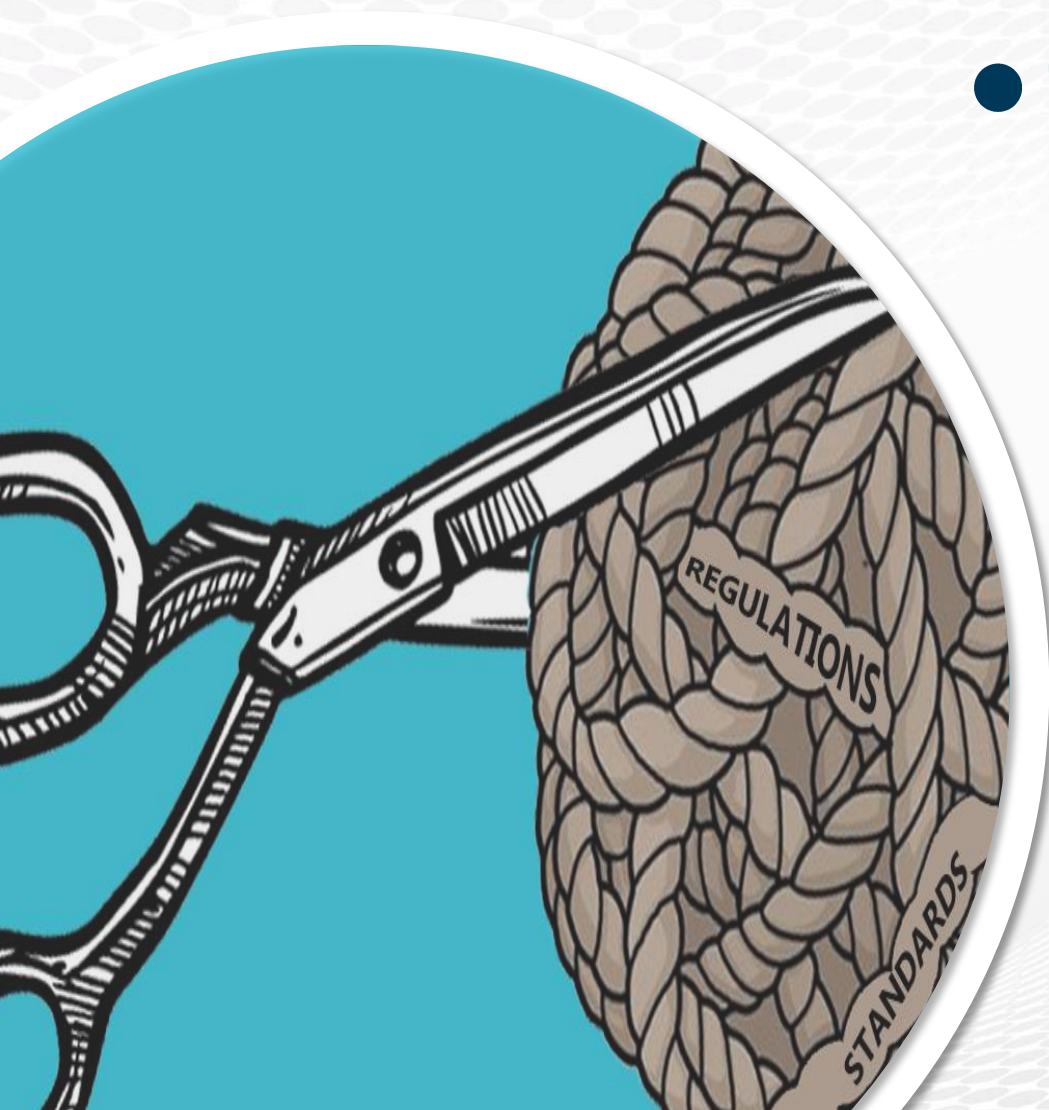
- ① 체감도 up
- ② 신속추진
- ③ Win-Win形 개선
- ④ 강력한 추진체계

● **(과제발굴) 민간·현장과 소통, 적극 발굴**

● **(처리절차) 규제심판부 통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규제존속 여부 결정**

➔ 7월중 첫 번째 성과물을 신속히 도출

①-2 기업활동 제약하는 핵심규제 혁파



- **현장 애로 해소**

* 투자·일자리 창출 애로규제를 현장과 소통, 적극 발굴

- **규제권한 지방이양**

- **덩어리 규제 발굴, 통합정비**

- **시설투자 등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 개선**

- **도시 용도지역제를 시대에 맞게 개편**

- **그림자규제 정비**

* 법령이 아닌 권리제한·의무부과 행정규제 개선

①-3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 해소

경제법령 형벌규정

**과도한 형벌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개선 추진**



공정거래법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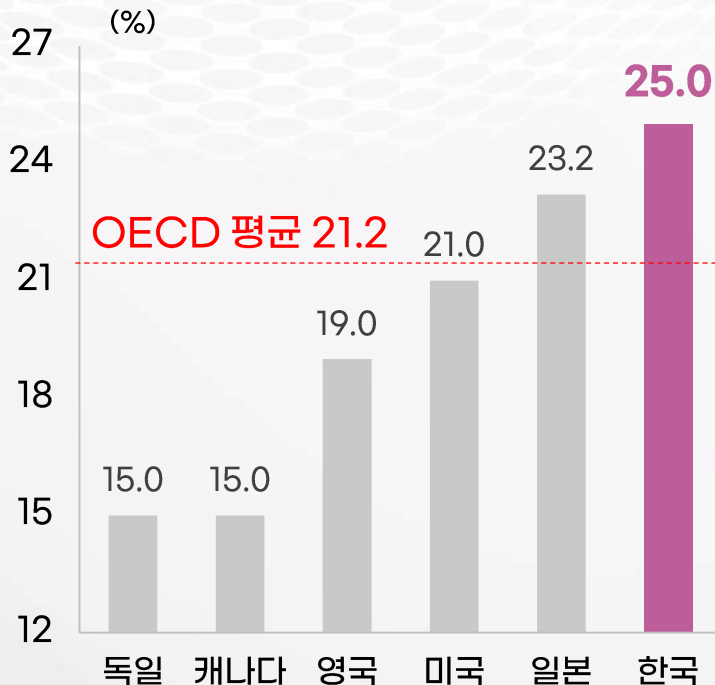
②-1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인세 정상화

✓ OECD 평균 큰 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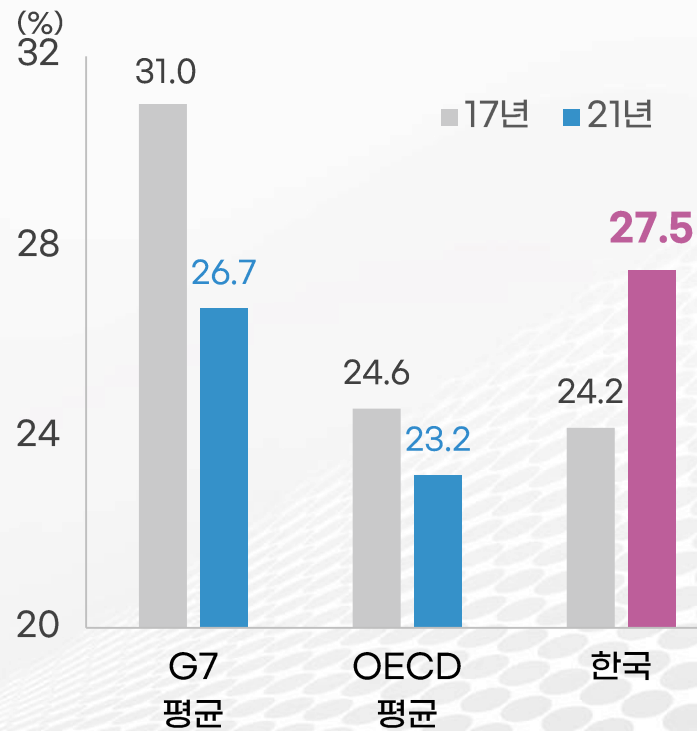
✓ 해외는 인하, 우리는 인상

✓ 복잡한 과세표준

< 최고세율(지방세 제외) >



<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 과세표준 구간 수 >



②-1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인세 정상화

현행

과표구간	법인세율
~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선

- 과표구간 **단순화**
- 최고세율 인하 (**25%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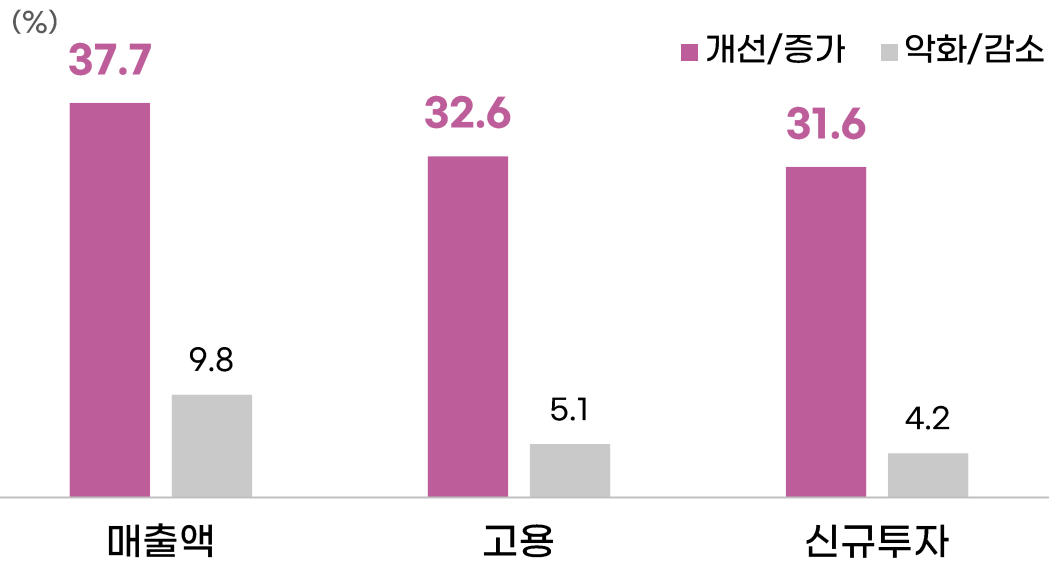
-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자 등 국민경제 전반에 혜택
- 중장기적으로 세수기반 확충 →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



②-2 세대간 기술·자본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투자·고용 증대 + 기업성장 차원에서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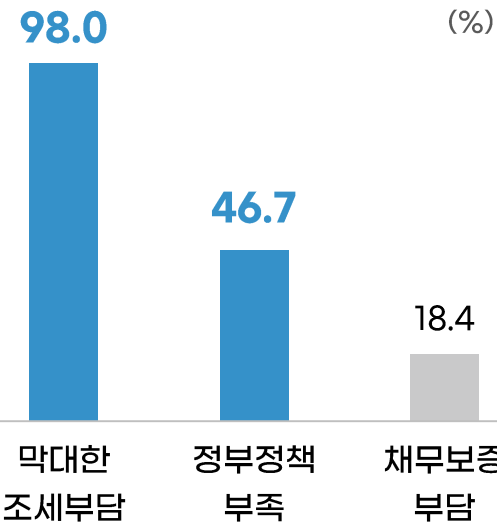
[가업승계 경험기업 승계 전·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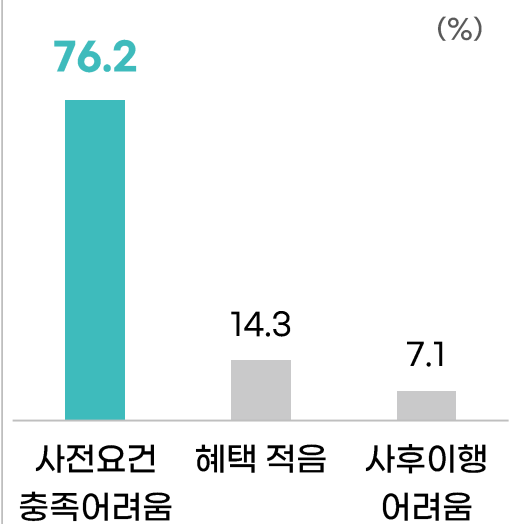
- '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중기중앙회) -

But, 조세부담, 사전요건 충족 등 애로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



[기업상속공제 미이용 사유]



- '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중기중앙회) -

②-2 세대간 기술·자본이전 촉진을 위해 기업승계 활성화

선택권 확대

납부유예제도 신설,
기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매출액 기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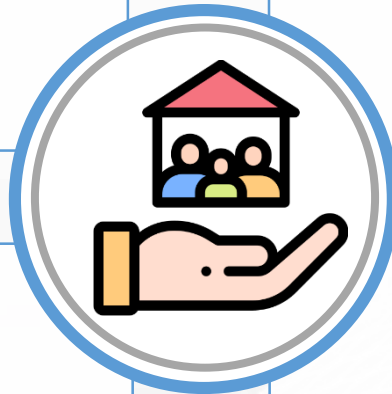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0.4->1.0조원)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축소
(상속 개시 후 7->5년) 등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기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②-3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 GVC 개편으로 첨단산업 경제안보 가치 증가

✓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

- 주요국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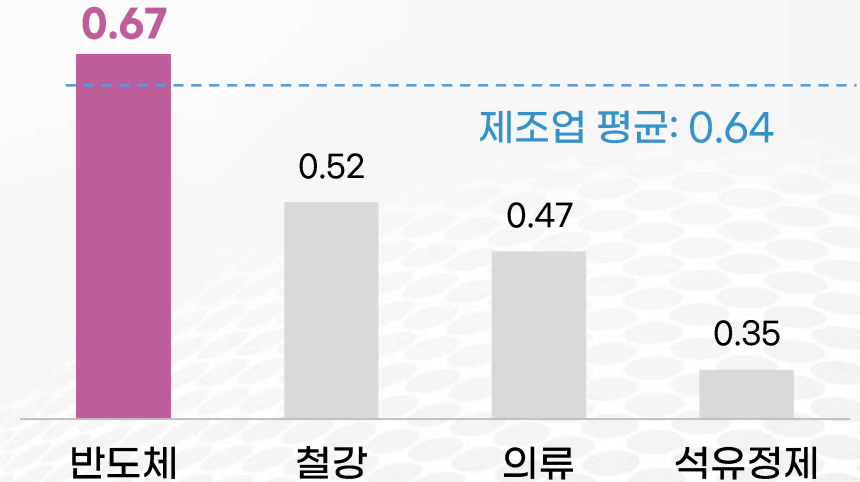
< 부가가치 유발계수('19년)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등
228억불 지원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
1조 위안 지원



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대·중견) 8~12% (중소) 16~20%

②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

②-4 투자·고용창출 유인제고를 위해 세제 정비

배당소득세



- 내국법인이 국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내국법인이 해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이월결손금



-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 결손부담 경감 위해 공제 한도 상향(60 → 80%)
*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 유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제도 실효성 등 고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폐지

통합고용
세액공제



- 고용 관련 유사 세제 지원(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통합·확대

③ 중소·벤처기업을 우리경제의 중추로 육성

●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혁신형 · 성장형 재정지원 및 정책금융 프로그램 비중 확대
- R&D 재정지원 스케일업 중심 개편

●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④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감사·처벌 강화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전속고발제도 운용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진입제한규제, 사업활동제약규제 등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표준계약서 마련
- 연동제 시범운영 ('22.下)
- 자율적 상생문화 유도 병행

플랫폼 경제 자율규제방안 마련

-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 범정부 협의체 구축
-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

① 공공개혁 :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재정

-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초 확립
-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를 여건변화를 반영해 합리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SOC · R&D 예타기준** 상향 (500 → 1,000억원)

공공
기관

-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비, 재무건전성 확보 등 **생산성 제고**
- 연공서열 중심 보수 · 인사 · 조직 관리를 **직무 · 성과 중심 전환**

연금

-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 노후소득 보장 위해 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
 - *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700 → 900만원 상향 조정

② 노동시장 개혁 :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유도

근로시간제도 합리적 개선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이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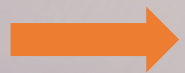
- ▶ 주52시간 틀 속에서 운영 개선
 -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단위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근속 1년 미만 임금대비 30년 이상 임금 수준 高

* (한국)2.95 (일본)2.27 (EU 평균)1.65

- ▶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 ▶ 임금·평가체계 도입 컨설팅 지원



7월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운영, 정책과제 마련

③ 교육개혁 : 미래선도 혁신인재 양성

대학교육 혁신·자율성 강화

-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규제개선 추진, 정원 획기적 확대
- ▶ 대학규제 개선위원회 설치, 법령·지침 전면 재검토
- ▶ 교부금 개편, 수입다변화, 재정 자율성 강화 등으로 대학재정 확충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 지방대, 직업계고를 지역·산업 필요인력 적시 공급체계로 개편
- ▶ 범부처 협업 신산업 인력양성체계 구축



④ 금융혁신 : 금융의 디지털 혁신·실물경제 성장 뒷받침

디지털 혁신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확대

- ▶ '금융규제개혁TF'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등 혁신과제 발굴·추진
- ▶ 정책금융의 민간중복 최소화 등 역할 재정립
- ▶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추진('22. 3/4)

자본시장 활성화로 실물경제 뒷받침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등

▶ 자본시장 거래부담 완화

* 금투세 2년 유예,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100억 이상 제외),
증권거래세 인하(0.23→0.20%)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해외소재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02시)까지 연장,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⑤ 서비스산업 혁신 :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권, 제조업 절반 수준 → 서비스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 향상

규제
합리화

- 콘텐츠·관광·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유연화
-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



육성기반
마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점 재검토·입법 추진
-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제조업-서비스업
차별해소

-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차별 해소
- 유망서비스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① 과학기술 · R&D 제도개편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22.11월)
-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 우주 · 감염병 등 분야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 신산업 육성전략('22.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
- AI·바이오·항공우주·로봇 등 유망 신산업 육성
-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원전 경쟁력 강화
- 반도체 등 초격차 확보



② 첨단 전략산업 육성

③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 ▶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축소·고령사회 대비

- ▶ 첨단기술 중심 병력구조 개편
- ▶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저출산 대응

- ▶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 부모급여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등
- ▶ 육아휴직(1 → 1.5년)·출산휴가 확대

④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효율적 감축경로 검토

- ▶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에너지믹스 합리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 운전
- ▶ 배출권거래제 총량·할당방식 재검토 등

저탄소 투자·소비 촉진

- ▶ 탄소중립 투자 유도
재정·금융지원
-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확대

ESG 생태계 조성

- ▶ ESG 공시제도 정비
- ▶ ESG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① 사회안전망강화

- **기초생보 지원대상·급여수준 확대**
* (생계) 기준중위소득 30 → 35%, (주거) 46 → 50%
-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도입 추진**
- **노인 기초연금 30 → 40만원 단계적 인상**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기준 단계적 상향**
* 중위소득 52% 이하 → 63% 이하



② 근로유인·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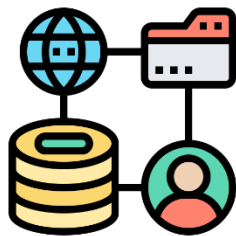
-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 대폭 감면**
* 10년 근속 시 50%, 20년 근속 시 100% 경감
-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금액 확대(10%수준)**
* 재산요건 2 → 2.4억원 완화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23년)**
- **공정채용법 입법**
- **청년도약프로젝트 추진**



4. 함께가는 행복경제

③ 복지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전국민 대상 확대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
-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연계서비스 통합 제공
- **스마트 사회서비스 R&D** 투자 확대
- 모태펀드·사회적금융 등
사회서비스 민간투자 활성화



④ 지역균형발전

- **지역주도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
*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 지역고유자산(역사·문화 등) 활용하여
차별화된 소도시 육성
- 기업의 **낙후지역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균특회계를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 추진
-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지원

*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



III. 당면 현안 대응



① 서민생활 부담완화

유가 부담 경감

유류세

인하폭 법정최대한도로
인하 (30→37%, 7월~)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15%)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 100원 한시인하
(1,800→1,700원)

대중교통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

농축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 농식품부·해수부 내 물가안정 대응팀 운영
- 돼지고기*, 계란 할당관세 물량 신속 수입
* 7.1일부터 1,105톤 도입 예정
- 비료가격 상승분(+1,801억원),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109억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600억원)

① 서민생활 부담완화

밥상물가 부담 완화

- 식용유 등 할당관세 적용
-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546억원, 7월~)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공제한도 10%p 상향)
- 김치, 장류, 커피·코코아 등 부가세 면제

생계비 부담 경감

공공요금

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원칙 관리

자동차

승용차 및 친환경 차량
개소세 인하·감면 연장

통신

5G 중간요금제 및
어르신·청년용
요금제 출시

생활비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 면제

②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세제 정상화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60 → 45%)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100 → 60%) +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22년 한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종과배제 인정기한 확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200만원 한도)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배제 등

금융 정상화

- (LTV) 생애최초 LTV 상한 완화(6~70 → 80%) 및 대출한도 확대(4 → 6억원)
- (DSR)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 개선
- (상환방식) 청년·신혼부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 도입

공급확대 규제완화

- (공급 로드맵)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정부출범 100일 내)
- (분양가상한제) 자재가격 급등요인 일부 반영 등 경직적 운영 합리화
- (규제지역) 현 규제지역 일부 해제 검토(6월말)

② 주거안정: 임대차 시장 안정

임차인 부담 경감

상생 임대인

- **인정요건 완화** (임대시 1주택자 → 다주택자도 가능)
- **혜택 확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 연장** (~'22년말 → ~'24년말)

갱신만료 임차인

-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일반 임차인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0/12 → 12/15%)
-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 → 400만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건설 지원

- **민간건설임대(법인·개인) 종부세 합산 배제요건 완화**
('21.2.17일 이전 임대등록분도 공시가격 6 → 9억원 이하)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준수)

경제안보 대응

- **공급망 3법 제·개정**
 - *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 **IPEF, CPTPP 등 다자간 블록화 논의 적극 참여**
- **해외자원확보 민간투자 지원 확대**
- **기초식량 국내 자급기반 확충·해외 공급망 확보**
- **첨단기업 유턴 유인 확대**
-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 확대**
 - * 현금지원 최대한도(50%) 허용

위기관리 강화

- **정부·관계기관간 정책공조 체제 강화**
- **거시경제여건 등 종합 고려한 정책조합 추진**
-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유도**
 - *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대비 상환계획 수립, 고금리대출 저금리 전환,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30조원) 운영, 맞춤형 자금지원(42조원)
- **시장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 * 기업위험평가 내실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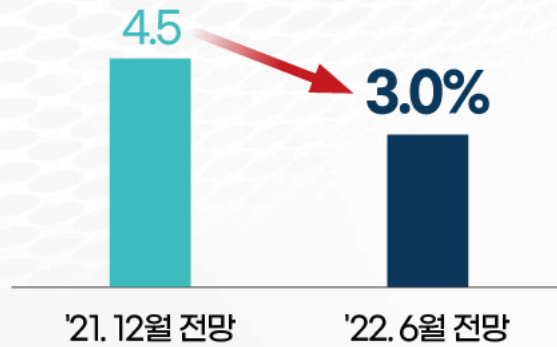
IV. '22년 경제전망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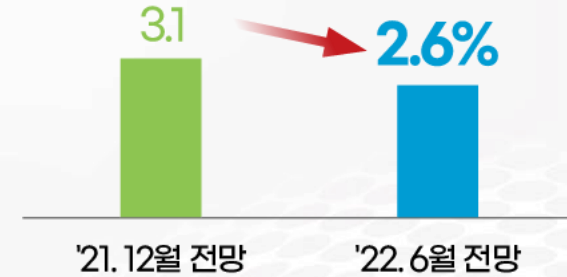
한국경제

성장

<세계 성장 전망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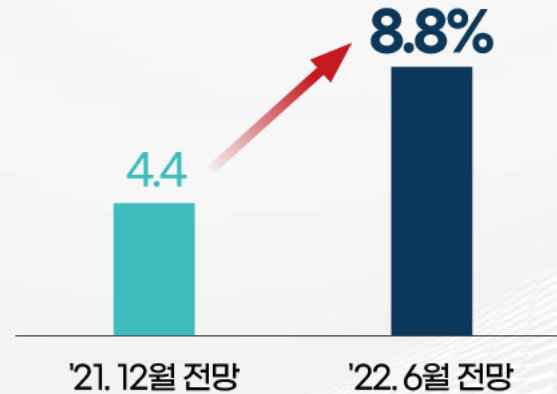


<한국 성장 전망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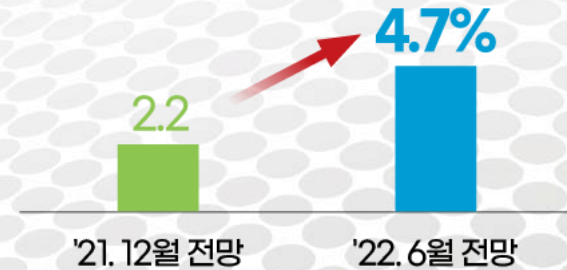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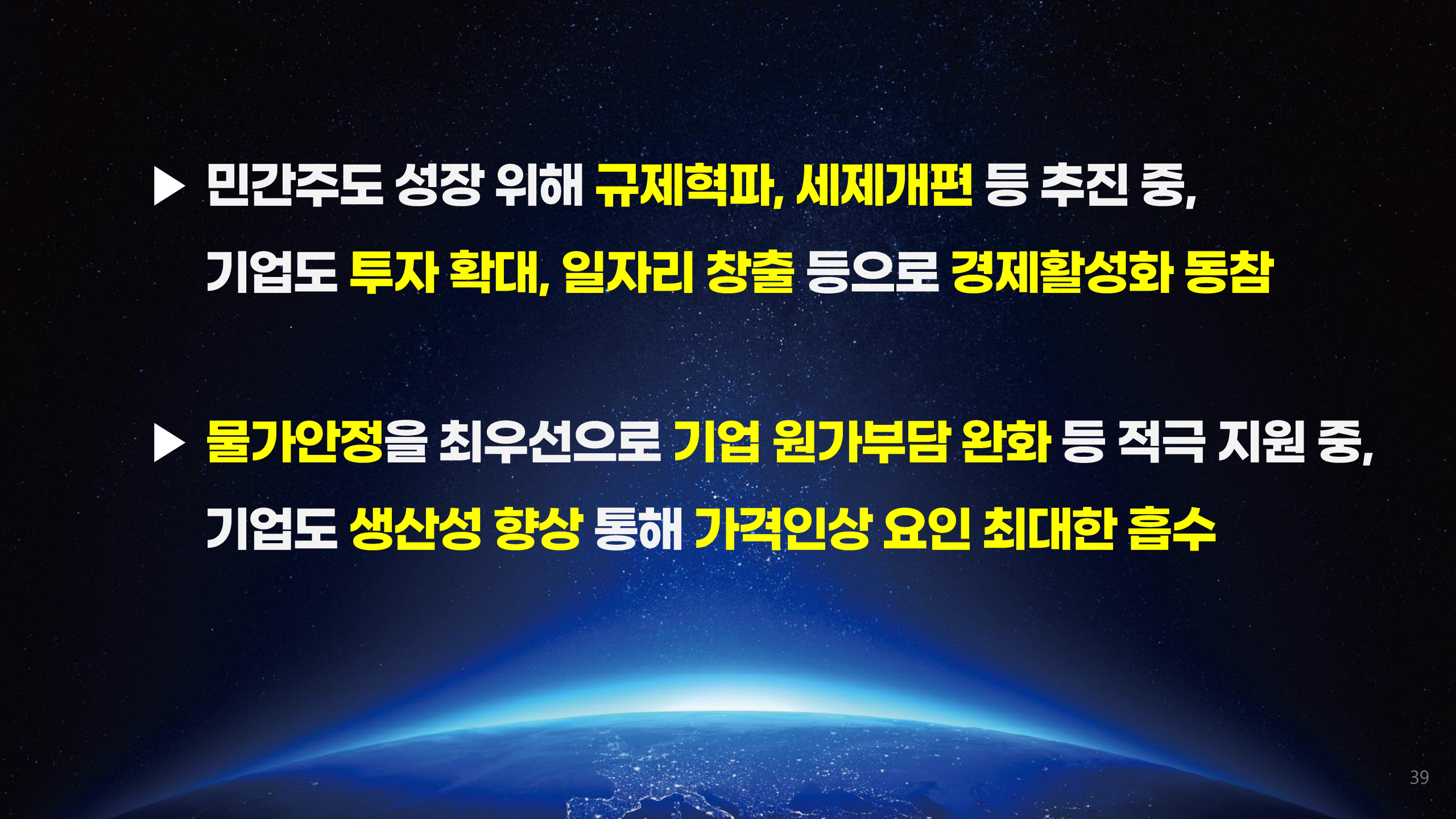
물가

<OECD 회원국 평균 물가 전망 (OECD)>



<한국 물가 전망 (정부)>



- 
- ▶ **민간주도 성장 위해 규제혁파, 세제개편 등 추진 중,
기업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활성화 동참**
 - ▶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기업 원가부담 완화 등 적극 지원 중,
기업도 생산성 향상 통해 가격인상 요인 최대한 흡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